

# 빅토리아후기(1870~1903)의 대외팽창성격 —자유무역제국주의론의 연속성테제를 중심으로—

徐廷勳\*

## I.

빅토리아시대의 대외팽창에 대한 인습적 연구들은 1870년대를 기준으로 빅토리아후기를 신제국주의시대로 규정하고 전기의 자유무역시대와 날카롭게 대비시켜왔다.<sup>1)</sup> 즉 빅토리아전기는 자유무역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식민지가 불필요한 反제국주의시대였으며 후기는 영국을 비롯한 열강이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식민지회득을 위해 격렬한 각축을 벌인 제국주의시대 였다는 것이다.

필자는 앞서 “19세기 중엽에 있어 영국의 대외팽창 성격논쟁”이라는 논문에서 이른바 자유무역시대의 영국이 단지 구중상주의적 제국을 거부했을 뿐이며 새로운 형태의 제국을, 즉 자유무역의 제국(empire of free trade)을 적극적으로 건설했음을 관련 학자들의 논쟁을 종합검토함으로써 확인한 바 있다.<sup>2)</sup> 간단히 말해 빅토리아전기는 반제국주의시대가 아니라 자유무역제국주의(imperialism of free trade)시대였다.

빅토리아전기의 대외팽창성격을 자유무역제국주의시대로 수정하는데 결

\* 사학과 전임강사

1) 이러한 단절론은 이거튼(H. E. Egerton)과 보델슨(C. A. Bodelson)등 제국사가들을 비롯하여 홉슨(J. A. Hobson)과 레닌(B. Lenin), 힐퍼딩(R. Hilferding) 등 경제제국주의론자들, 그리고 정치적 혹은 사회적 요인을 강조한 랭거(W. L. Langer)와 슘페터(J. A. Schumpeter)등 대다수 제국주의연구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필자의 논문, “19세기 중엽에 있어 영국의 대외팽창성격논쟁” 부산사학 제10집(1986) 참조.

2) 앞서 나온 논문.

정직인 공현을 했던 캐임브리지 역사학자, 갤러거(J. Gallagher)와 로빈슨(R. Robinson)은 한 걸음 더 나가 빅토리아시대 전체가 자유무역제국주의 시대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영국의 대외팽창성격이 후기에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영국의 정책은 빅토리아후기에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제국적 폐권(imperial supremacy)을 확대하는데 적법지침(formal rule)보다는 간접통제(informal control)를 선호했다. 당시에 걸쳐 적법지침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영국의 폐권에 대한 열강의 도전이 격화되었던 후기보다 전기의 상황에서 간접통제의 방식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가리울 수는 없다. …자유무역제국의 정책은 ‘가능하다면 간접통제를 통해서 무역하라, 그러나 불가피할 때는 저지를 해서라도 무역하라’라는 것이다.”<sup>3)</sup>

이들의 연속성 테제는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신제국주의의 신화’ 역시 분쇄하려는 것이며 후자에 더욱 중점을 놓아져 있다.<sup>4)</sup> 이들은 특히 흉손-레닌 모형(Hobson-Lenin model)의 경제제국주의론, 즉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이라는 ‘노쇄한 짐승’을 박살내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공언하였다.<sup>5)</sup>

이들은 ‘팽창하는 영국경제’<sup>6)</sup>가 1870년 이후 대규모 식민지팽창을 가져

3)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VI, No. 1 (1953) (앞으로는 E. H. R로 줄이겠음)

4) 캐나-포어스트너는 갤러거와 로빈슨의 자유무역 제국주의론이 주로 ‘자유무역 시대’에 대한 비판임을 주장하나 이들의 추후 저작들이 ‘신제국주의’ 비판에 전념하고 있음을 볼 때 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의 주장은 갤러거와 로빈슨이 전자의 경우 성공했으나 후자의 경우 실패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 Kanyana-Forstner “A Finanl Comment on the Value of Robinson and Gallagher,” in *Imperialism; The Robinson and Gallagher Controversy*, Wm. Louis, (Franklin Watts, 1976) p. 230. (앞으로 G. R. Controversy로 줄이겠음)

5) H. Brunschwig의 *Mythe et réalités de l'imperialisme colonial français, 1871~1914*, 에 대한 갤러거·로빈슨의 서평 *Journal of African History*. I (1961) p. 158. A. G. Hopkins, “Economic Imperialism in West Africa: Lagos, 1880~92” E. H. R. Vol. XXI, No. 3 (1968) p. 580에서 재인용. 이들의 흉손·레닌이론에 대한 반감은 이들의 저서들의 도처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6) 갤러거와 로빈슨의 저술들에는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비판적 상황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팽창하는 경제(expanding economy)라는 용어를 쓸 거 사용하고 있다.

오기에 충분한 추진력을 갖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그러면 왜 그러한 팽창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연구의 초점은 맞추었다. 이들은 빅토리아후기의 최대 식민지 팽창사례인 영령아프리카제국이 일종의 전략적 요인, 구체적으로 말해 先代로부터 전승되어온 관리들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수립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논증과 경제제국주의론이 완전히 논파될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빅토리아전기의 팽창에 대한 갤러거와 로빈슨의 설명이 제국주의의 경제적 해석인데 비해 후기에 대한 설명은 얼핏보기에도 제국주의의 비경제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자유무역제국주의론은 전기의 경제적 해석과 후기의 비경제적 해석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 된다.

본 논문은 얼핏보아 모순을 안고 있는듯한 연속성 테제가 이들의 설명에서 어떻게 정립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논리전개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고찰한 뒤 이들의 주된 비판대상인 흉준—레닌모형<sup>7)</sup>의 경제제국의론과 자유무역제국주의론의 차이를 따져보려 한다.

우리가 ‘신제국주의’와 ‘구제국주의’의 차이를 혜아릴 수 있게 된다면, 빅토리아시대 전체에 걸쳐서 영국의 대외팽창성격의 연속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II.

갤러거와 로빈슨은 커다란 논쟁을 야기한 그들의 첫 논문, “자유무역제국주의론”에서 경립한 가설들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 사실들의 연구에 전념했다. 이들의 추후 저술인 「아프리카와 빅토리아인들」과 “아프리카분

7) 갤러거와 로빈슨을 비롯한 경제제국주의 비판자들은 흉준이론과 레닌이론을 나를대로 합성해 흉준—레닌모형을 전제한 뒤 그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흉준과 레닌의 주장은 엄연히 다르며 비판자들의 전제가 잘못된 것일 때 그에 대한 비판은 오류가 될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뒤에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이 논문, p.163 참조할 것.

할”<sup>8)</sup>은 제국주의의 이론과 구체적 사실 사이에 간격을 벼우려는 혁명적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sup>9)</sup>

빅토리아후기의 식민지팽창에 대한 이들의 실증적 연구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그 이론적 토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초기 논문에 제기된 자유무역제국주의론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빅토리아시대의 팽창하는 경제는 새로운 지역의 통합을 요구하며 그러한 요구는 대외무역과 투자, 이민, 문화이식 등으로 나타난다. 영국정부는 새로운 지역의 통합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기능만을 한다. 영국정부가 무역의 안전을 수립하는 데만 우세한 힘의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려고 한다는 점이 자유무역제국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이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피 할 땐 적절지배도 불사한다. 무역을 통해 영국 경제의 위성경제권으로 일단 편입된 지역은 점진적으로 영국의 친접지배를 받게 된다.<sup>10)</sup>

이처럼 갤러거와 로빈슨은 친접지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도에 걸쳐 있는 친접지배도 제국주의로 규정하며 빅토리아시대의 영국정부는 특히 친접지배를 선호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약식제국주의(informal imperialism)는 실상 통치비용을 들이지 않는 값싸고 효율적인 지배를 의미한다.<sup>11)</sup>

8) *Africa and Victorians; the Official Mind of Imperialism*, Macmillan (1967 ※ 초판은 1961), (추후엔 Africa로 줄이겠음) “The Partition of Africa” in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 593~640. (이후론 Partition으로 줄이겠음) 그리고 이밖에 로빈슨이 단독집필한 “Non-European Foundations of European Imperialism; Sketch for a Theory of Collaboration” in *Studies in the Theories of Imperialism* ed. R. Owen, B. Sutcliffe, Longman, (1972) pp. 142~72가 있는데 이 논문은 현저하게 주변부중심의 제국주의론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찰대상에서 제외했다.

9) 이러한 점은 갤러거·로빈슨의 자유무역제국주의론의 다른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제국주의연구사에 커다란 공헌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루이스는 이들의 시도를 제국주의 연구사에서 혁명적 발전(historiographical revolution)이라고 격찬하였다. Louis, 앞서 나온책, *G.R Controversy...*, p. 3.

10) 앞서 나온 논문,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pp. 5~7.

11) 갤러거와 로빈슨은 빅토리아시대의 자유무역이 치닌 ‘평화성’과 ‘호혜성’이란 신화에서 평화대신 지배의 본질을 밝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호혜의 이데올로기애에 대해선 별다른 이해를 보인 것 같지 않다. 이들은 영국관리

무역을 통한 간접지배를 선호하는 자유무역제국주의는 영국의 절대적 인공업력 우세와 강력한 해군력이라는 물질적 토대위에서 생겨나고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sup>12)</sup>

자유무역제국주의론의 이러한 내용으로 볼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경제 제국주의론의 일종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무역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요인의 제국주의 팽창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추진력이 되기 때문이다. 란데스(D. Landes)가 이런 점에서 자유무역제국주의론이 모든 팽창사례들을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한다고 비판한 점은 합당했다.<sup>13)</sup> 논의의 현시점에서 자유무역제국주의론은 적어도 일종의 경제제국주의론이라는 점에서 이론 바 흡수—레닌보형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비토리아후기의 식민지팽창사례들, 즉 직접지배체제의 수립사례들에 대한 갤러거와 로빈슨의 설명이 기본적으로 비경제적 요인에 입각하고 있음을 곧 발견하게 된다. 리히트하임(G. Lichtheim)의 말처럼 이들의 자유무역제국주의론은 1880년 이후 경쟁하는 열강들 사이의 세계분할이 어떤 합리적인 경제적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시도였다.<sup>14)</sup>

이처럼 관련학자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제국주의론에 대한 평가의 혼란한 대립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비토리아후기의 대규모 식민지팽창사례에 대한 갤러거와 로빈슨의 설명을 고찰해 보자.

들의 ‘문명전파’나 ‘근대화’, ‘영국화’, ‘자유화’ 등 상투어를 떨 다룬 부단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영국의 간접지배가 원주민 사회의 자유화·번영에 이바지한다는 당시 대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앞서 나온 책 *Africa pp. 2~8*, 자유무역의 호혜성이네 윤리를 기는 셸렐(B. Semmel)과 머슨(Musson) 등에 의해 비판되었다. 필자의 앞서 나온 논문, “19세기 종열에 있어...” pp. 112~116 참조. 결국 자유무역은 원주민 사회에는 불평등조약과 매관세력의 형성 및 종속경제로 전락을 의미하며 영국의 세계시장지배를 위한 값싼 수단이었다.

12) 앞서 나온 필자의 논문, pp. 3~4.

13) “The Nature of Economic Imperialism” in *Economic Imperialism* ed. K.E. Boulding, T. Mukerje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1972) p. 139. 란데스의 논문은 1961년에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갤러거와 로빈슨의 같은 해에 출판된 《아프리카와 비토리아인들》을 읽지 않은 채 이들의 초기논문만을 보고 쓴 것이다.

14) *Imperialism*, Penguin Books. (1971) p. 167.

19세기 마지막 분기(1875~1900)에 기존의 식민지제국을 보유하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새로이 독일과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이 식민지 획득을 위한 자축에 나서 거의 전세계를 분할했다. 영국은 열강의 세계 분할 과정에서 최대의 식민지제국을 건설했다. 영국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자의 뜻(lion's share)을 차지했다.<sup>15)</sup> 열강의 세계 분할은 그 거대한 규모와 급속한 진행 속도, 새로운 국가들의 참여, 그리고 마구잡이적 속성(unselective nature)<sup>16)</sup>으로 인해 분할을 주도했던 정치가들조차 어리둥절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느 누구보다 많은 식민지 병합을 단행했던 소울즈버리(R. Salisbury) 수상은 1885년 관직에 복귀하면서 열강의 격렬한 식민지 자축을 목격하고 큰 놀라움을 나타냈다. “1880년에는 아무도 아프리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 돌연 한 혁명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나 이프리카각축은 엄연히 진행되고 있다”<sup>17)</sup>라고. 이러한 소울즈버리의 말은 당시의 정치가들이 ‘잠시 정신이 나가서’(a fit of absense of mind) 거대한 식민지 분할을 단행한 것처럼 보인다.<sup>18)</sup>

영국은 왜 이러한 식민지 자축에 참여하여 거대한 식민지제국을 건설하였는가? 갤러거와 로빈손은 이에 답변하기 위해 이 시대의 가장 극적이며 최대 규모의 식민지 팽창사례인 영령아프리카제국의 건설 과정에 주목하-

15) 19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영국은 무려 375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획득하여 식민지 각축에서 단연 선두에 섰으며 프랑스는 35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획득했으나 프랑스 식민지는 사하라 사막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이었다. Hobson, *Imperialism, A Study*, Butler &c Tanner Ltd, (1968, 초판은 1902년) 제1장 1절, 제국주의의 크기 참조. 이런 점에서 포터는 자기 저서의 제목을 “사자의 뜻”이라고 정한듯 하다.

B. Porter, *The Lion's Share, A Short History of British Imperialism, 1850~1970*, Longman (1977)

16) C. C. Eldridge, *Victorian Imperialism*, Hodder &c Stoughton, (1978) pp. 123~4.

17) Eldridge, 앞서 나온 책, p. 123에서 재인용.

18) “잠시 정신이 나가서”라는 말은 제국사가인 셀리가 1881년 봄에 18세기 영국의 식민지 팽창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말인데 당시 영국인들이 자기 시대의 식민지 팽창을 설명할 때도 사용했었다. G. Shepperson, “Africa, Victorians and Imperialism” in G. R. Controversy... pp. 163~4.

이 설명 아닌 설명은 답변이 궁합 때 나오는 것인 데 뒤에 갤러거와 로빈슨의 설명이 “정신이 나가서”에 접근하게 됨을 보게 된다. 이 논문 p. 155 참조할 것.

였다.

이들은 식민지 각축과정에서 먼저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따져본 뒤 영국내외, 즉 중심부의 경제적 압력이 아프리카제국건설의 주요동인이 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영국의 대외무역과 투자, 이민에 대한 세계의 각 지역별 통계는 대체로 미국과 남아메리카, 인도 및 빠인경착식민지들에 집중되어 있고 아프리카는 극히 미미한 존재였음을 나타내고 있다.<sup>19)</sup> 더구나 이 통계는 각축 당시 뿐만 아니라 식민지건설 이후 상당기간이 지났을 때까지도 영령아프리카제국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는 그 당시 영국인들에게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겔러거와 로빈슨에 따르면 당시 영국정부는 ‘인도로 가는 길목’인 이집트와 남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 관심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아프리카 일부 해안지역에서 소규모 무역업자, 투자가, 선교사들이 조금씩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팽창하는 영국경제의 주류는 대체로 정글과 사막으로 뒤덮힌 아프리카를 의연하고 기존시장의 더욱 효율적 개발을 지향했으며 영국정부 역시 여전히 이집트와 남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영향력행사에 만족하고 어떤 식민지건설도 극력 회피해 왔다.

그렇다면 팽창하는 경제가 요구하지 않은, 그리고 영국정부 역시 원하지 않은 영령아프리카제국은 왜 건설되었는가? 겔러거와 로빈슨은 논의의 현단계에서 영령아프리카제국의 건설은 자유무역제국주의 정책의 탈영임을 인정하였다.

19) 앞서 나온 책 *Africa...*, p.6. 겔러거와 로빈슨은 W. Scholte와 A.K. Cairncross, B. Thomas 등의 통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는 그 비판자들이 경제제국주의론을 공격할때 단풀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20) 앞서 나온 책 *Africa...* p.14~6. 겔러거와 로빈슨은 당시 상공회의소의 기록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에게 주목한 하인즈의 연구는 이들이 제시한 증거와 대조적으로 식민지팽창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 p.165 참조할 것. W.G. Hynes, "British Mercantile Attitudes Towards Imperial Expansion," *the Historical Journal*, 19, 4 (1976) pp. 969~979.

“이전 시대의 팽창경험들이 남긴 교훈과 선입관, 그리고 지속되어온 흐름에 반해서 영국인들은 이집트를 점령했고 거대한 열대아프리카에 제국의 경계선을 확장했다. …아프리카에서 후기 빅토리아제국주의의 한가운데 명백할 역설이 있다. …(자유무역제국주의의) 경제적 수단(arms)과 제국적 수단사이에 현저한 불일치가 존재한다.”<sup>21)</sup>

이같은 불일치가 이들로 하여금 제국건설을 비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게 만든 이유이다.

이제 이들은 원하지 않았다고 하나 결국 제국을 건설한 주역들인 관료들에 대해 연구의 촛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다른 요인들이 없을 때 관리들의 동기 자체가 제국건설의 결정적인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22)</sup> 이들은 빅토리아시대의 대외정책 결정에서 드러나는 ‘관료적 사고’(official mind)를 나름대로 정교한 개념으로 정립하였다.<sup>23)</sup> 이들이 제시한 관료적 사고 개념의 몇 가지 특징을 간추리면 첫째, 관료적 사고는 통합성을 갖는다. “돌발사건과 동기들을 추적함에 있어, 모든 길은 반드시 다우닝가(Downing Street)로 통한다”<sup>24)</sup>는 말이 상정하듯이 관리들의 정책 결정은 아프리카제국을 형성토록 이끈 모든 팽창조건들이 결집된 하나의 통합적 영역이다. 이러한 통합성에 대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갤러거와 로빈슨은 어느 제국주의연구자들보다 더 열심히 문서고의 먼지에 쌓인 관변자료들을 살살 이 섭렵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들은 뒤에 “만약 정책 결정자들이

21) 앞서 나온 책, *Africa...*, p.17.

22) 갤러거와 로빈슨은 석민지팽창을 가져올 만한 경제적 압력 뿐만 아니라 중심부에선 어떤 다른 양력—정치적, 전략적, 사회적 요인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Africa...*, p.18. 따라서 이들은 중심부·중심의 모든 제국주의론을 거부하고 주변부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영국관리들의 특유한 대응방식에 주목하였다.

23) 앞서 나온 책, *Africa...*, pp.18~25.

24) 이에 대비해서 “모든 길은 롬바르드가 (Lombard Street—런던의 금융가)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금융자본의 지배를 강조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의미한다. 양자는 제국주의의 정치적 해석과 경제적 해석의 장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B.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in *Selected Works*, Progress Publishers(Moscow, 1977) 제3장 금융자본과 금융파두체, pp.200~212 참조.

남긴 문서가 믿을만 하다면”<sup>25)</sup> 자신들의 결론이 확고부동할 것임을 당당하게 강조할 수 있었다.

둘째, 관료적 사고는 상당한 독자성을 가진다. 혈통에 의하건 능력에 의하건 간에 고급관리가 된 자들은 전체국민에 대한 의무와 국가안보를 제일의 고려대상으로 삼아온 귀족적 전통을 공유하고 서로 총돌하는 이기적 이해들로부터 초연한 위치에 서서 이를 조정하는 것을 직업적 소명으로 삼았다. 관리들은 상충하는 여러 팽창압력들을 따져보고 이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자신의 정치적·도덕적 신념에 여과된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 관료적 사고의 이러한 독자성은 직업적 전문성에 입각한 계급적 초연성을 의미한다.

셋째, 관료적 사고는 연속성을 가진다. 여기서 관료적 사고는 개개인의 사고가 아닌 집단적 사고(collective mind)를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속정당의 이해율로기나 개성의 차이는捨象될 수 있으며 관료적 사고는 일정한 전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9세기 영국의 대외정책의 전통에는 약간의 힘에 뒷받침 되는 무역을 통해 원주민사회를 개화시키고 협력체제를 수립한다는 낙관적인 자신감과 제국번영의 초석인 인도의 안전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판단이 혼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다른 요인들이 없거나 미약할 때 관리들의 정책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조금 뒤에 관리들이 전승받은 이같은 전통이 제국건설의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알게 된다. 「아프리카와 빅토리아인들」의 副題가 “관료적 사고의 제국주의(The Official Mind of Imperialism)”라고 붙여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sup>26)</sup>

이제 갤러거와 로빈슨은 식민지팽창을 실천에 옮긴 관리들의 동기를 밝히기 위해 ‘사회적 분석을 정교화하는 작업’ 대신 ‘년대기를 고찰하는 초

25) 앞서 나온 책, *Africa...*, p.464.

26) 이 책이 1961년 처음으로 출판되었던 당시 부제는 “암흑대륙에서 제국주의의 절정”(The Climax of Imperialism in the Dark Continent)이었으나 뒤에 “관료적 사고의 제국주의”로 바뀌었다.

라한 작업’에 들어갔다.<sup>27)</sup> 그들이 알고자 했던 것은 “판례들이 왜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진격을 결정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겔리거와 로빈슨은 영령아프리카제국을 가져온, 보다 넓게 말해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을 가져온 단초적 사건을 1882년 이집트의 내부위기에서 발견하였다.<sup>28)</sup> 이들에 따르면 영국정부의 이집트에 대한 주된 관심은 인도로 가는 길목(Indian Route)인 수에즈운하의 안전에 있었으며 이러한 전략적 이해는 이집트정부에 대한 영·불 공동의 영향력행사에 의해 잘 보전되어 왔다. 영·불 양국정부는 현상유지에 만족했다. 그러나 1875년 이집트정부의 재정파탄은 기존의 영향력체계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므로 양국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이집트정부의 재정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됐다.<sup>29)</sup> 이러한 개입은 영·불에 협력해온 이집트의 기존체제, 즉 태수체제(Khedivate)의 권위를 강화하는 대신 이를 더욱 약화시켰다. 영·불의 개입에 반발한 이집트의 민족주의자항제력은 외세에 대한 거부와 함께 기존체제를 공격하였다. 1882년 이집트의 내부위기는 고조돼 영·불의 영향력체계는 거의 와해되었다. 같은 해 영국정부는 단독으로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27) 앞서 나온 책, *Africa..., p.25.*

28) 같은 책, pp.76~122.

앞서 나온 논문, “The Partition of Africa” pp.595~602. 이 논문은 《아프리카와 비토리아인들》을 요약한 것이지만 후자가 영령아프리카제국의 형성원인을 밝히는데 범위를 국한시킨 데 비해 전자는 후자의 결론을 전제 열강의 아프리카분할에 대한 설명에까지 일관화시켰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 겔리거와 로빈슨이 이 같은 일관화를 단행하였던 이유는 이들이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 열강까지 포함한 중심부경제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팽창압력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영국의 이집트정부이 열강의 분할을 가져온 출발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아프리카 분할에서 수동적인, 다시 말해 영국의 조치에 대한 반사적 역할만을 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독의 제국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비판이 전개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범위를 영국에만 국한하겠다.

29) 여기서 약간의 배경설명이 필요하다. 19세기 중엽 터키제국을 멍독상으로만 종주국으로 삼아온 이집트의 태수체제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적극적인 공업화시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공업화는 거대한 재정적 자리를 가져왔으며 1873년 유럽 경제를 강타한 대불황(Great Depression)은 이집트 재정을 파멸로 이끌었다. 영·불정부는 이집트재정에 대한 공동의 통제권을 회복하고 세제를 개혁하여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설명에서 휴스봄같은 경제사가들이 셉사리 공채소유자(bondholder)의 영향력을 강조하는데 비해 겔리거와 로빈슨은 수에즈운하의 안전을 위한 영향력체계의 보존을 강조한다. E.J. Hobsbawm, *Industry and Empire*, Penguin Books, (1979) p.130.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영국정부가 왜 이집트를 정복했는가 하는 것이다. 갤러거와 로빈슨은 정복을 결정한 관리들이 직접지배체제의 수립을 원하지 않았으며 단지 기존의 영향력체계의 회복만을 의도했음을 강조하였다.<sup>30)</sup> 이들에 따르면 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광채소유자들의 이익보전 보다 수에즈운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으며 그러한 결정은 식민지수립이 아닌 영향력체계의 회복을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정책결정자들은 파머스톤이 즐겨 사용했던 일격을 가해 이집트인의 협력체계를 수립한 뒤 곧 군대를 철수하려고 했으며 그들의 결정이 이집트의 평화와 진보에 이바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sup>31)</sup>

우리는 여기서 판료적 사고의 연속성을 혼자하게 볼 수 있다. 그것은 한번의 합포사격으로 원주민사회의 문을 열게하고 그 뒤 무역을 통해 그 사회를 영국화, 즉 개화시켜 협력체계를 수립할수 있다는 빅토리아전기로부터 전승된 자진감이었다. 그리고 인도루트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집착 역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주변부사회 위기에 직면해 영국의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군대파견의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승되어온 사고였다.

그러나 결과는 정책결정자들의 낙관적 예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영국정부는 쉽사리 협력자를 발견하는 대신 민족주의저항이라는 수렁에 발을 끓이게 되었다. 정책결정자들은 뒤늦게 민족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결정이 대실책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열강의 자축은 시작된 뒤였다.

이제 갤러거와 로빈슨의 설명은 전체아프리카의 분할로 급속하게 달라간다. 이들에 따르면 영국의 이집트점령 장기화는 이지역에 이해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를 분노하게 만들어 영국의 사소한 이해가 결린 서아프리카지역에서 견제정책(pin-prack policy)을 전개하도록 했다.<sup>32)</sup> 독일은 영·

30) 앞서나온 책, *Africa...*, pp. 94~121. 이들은 그러한 개입의 동기에 대해 장황하리 만큼 많은 노력을 보였다.

31) 자유무역제국주의의 '호혜성'에 대한 앞서의 고찰을 참조할 것. 이 논문의 p.147,

32) 앞서나온 책, *Africa...*, 제6장, 사하라사막이남의 반향, (Repercussions

불사이의 불화를 화대하려는 외교적 목적을 위해 아프리카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해왔던 아프리카는 이제 유럽 열강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의 장으로 승격되었다.<sup>33)</sup>

갤러거와 로빈슨은 열강의 자축이 격화된 상황에서 인도제국의 안전에 대한 관리들의 우려가 커졌으며 그러한 우려가 영령 아프리카제국의 건설에서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도 이러한 사할적이 해(인도제국의 안전)에 간접적으로라도 연관되기만 하면 관료들은 판방의 자세를 버리고 신속하게 개입했다. 정책결정자들이 남긴 문서가 믿을만하다면, 이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한 것은 새로운 아프리카제국을 건설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구인도제국을 보호하려 한 것이었다.”<sup>34)</sup>

따라서 갤러거와 로빈슨에게는 영령 아프리카 제국이 ‘인도제국의 한 거대한 주석’(a gigantic subnote)에<sup>35)</sup> 불과하며 ‘우연과 계산착오의 소산’이었다.<sup>36)</sup> 왜냐하면 아프리카분할의 촉발제인 영국의 이집트점령이 계산착오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영령 아프리카제국이 상당한 기간동안 지도상에만 존재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였다.<sup>37)</sup> 이들

33) 앞서 나온 논문, “The Partition of Africa,” pp.160~209. 갤러거와 로빈슨의 설명에서 남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영국의 팽창은 이집트사태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 지역 역시 관리들의 인도루트안전에 대한 집착이 주요 팽창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목적상 이 지역을 별도로 고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34) 앞서 나온 논문, “The Partition of Africa,” pp.605~7. “유럽의 세력균형의 변화로 이집트점령은 열대 아프리카에서의 사소한 분쟁들의 중요성을 부풀렸으며 각축을 유발했다. 프랑스는 카이로에서 영국을 밀어내려는 조급한 희망을 갖고 서 아프리카로 돌진했으며 독일은 유럽에서 영국의 지지를 강요하기 위해 동·서 아프리카로 돌진해 들어갔다.” 앞서 나온 책 *Africa...*, p.162. 갤러거와 로빈슨은 유럽의 세력균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국공업의 상대적 약화, 현지의 제국주의(sub-imperialism) 등 다른 요인들도 아프리카분할에서 나름대로 역할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잠재적 요인들은 이집트점령, 다시 말해 이집트내부위기에 대한 관료적 사고의 전승되어온 판단에 의해서만 구체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책, p.466~7.

35) 같은 책, p.464.

36) 앞서 나온 논문, “Partition...” p.616.

37) 앞서 나온 책, *Africa...*, p.465.

37) 앞서 나온 논문, “Partition...”, pp.632~3.

은 영령아프리카제국이 뒤늦게 경제성 있는 식민지로 개발되어야 했음을 지적하고 경제체국주의론이 그 순서를 뒤바꾸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경제체국주의론은 國旗앞에 무역을 두며 정복앞에 자본을 둔다. 그래서 마차가 말을 끄는 셈이다.”<sup>38)</sup>

결국 갤러거와 로빈슨에게 비토리아후기의 최대식민지 팽창사례인 영령아프리카제국은 새로운 압력의 소산이 아니라 구제국을 보호하려는 전통적 정책의 한 우연한 부산물이었다.

다시 말해 ‘신제국주의’라는 것은 구자유무역제국주의의 전통에 충실했던 영국관리들이 구제국을 보호하기 위한 한 우연한 방편에 불과했다. 우리는 여기서 관리들의 팽창동기의 현저한 연속성을 볼 수 있다.

### III.

이제까지 우리는 갤러거와 로빈슨이 중심부에서 객관적 팽창요인을 구비하지 못한 제국주의(imperialism without impetus)를 정책결정자들의 주관적 동기에 의해 설명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들의 논리전개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고찰해보자.

영령아프리카제국의 건설에 대한 갤러거와 로빈슨의 설명은 이들이 정교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책결정자들이 잠시 정신이 나가서”라는 설명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의 전체아프리카분할에 대한 설명에서 단초가 되는 이집트침령이 결국 정책결정자의 계산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정신이 나간 것과 계산착오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繼起의인 제위기들에 대한 일련의 경험적인, 종종 뒤죽박죽인(muddled) 반응들을 서술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는 카(E. H. Carr)의 비판이 이런점에서

38) 앞서 나온 책, *Africa..., p. 409.*

적절하게 보인다.<sup>39)</sup> 오웬(R. Owen)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정체결정자들의 동기를 찾기 위한 논대기적 고찰방식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sup>40)</sup> 왜냐하면 그러한 접근방식은 어떤 일반적인 제국주의이론의 수립 가능성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신이 나가서”는 설명으로 볼 수 없다.

겔러거와 로빈슨의 설명은 한편으로 ‘대실체’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편에선 지나치게 단일요인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이 앞서와는 경반대의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은 “하나의 결정적 요인에 입각한 어떠한 제국주의이론도 아프리카 분할이란 복잡한 현실(reality)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며”<sup>41)</sup> “사회과학자들의 어떠한 사후합리화(hindsight)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분할이면에는 어떤 포괄적 원인이나 목적이 없었음”<sup>42)</sup>을 되풀이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언명과는 달리, 이들의 분할설명에는 ‘인도안전이란 절대자’(Salus Indiae Suprema Lex)<sup>43)</sup>가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도안전에 간접적으로라도 연관되기만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지역도 영국의 식민지로 전환되고 있다.<sup>44)</sup>

39) “저자들은 마르크스와 흉叟, 혹은 레닌의 제자로 취급될까 너무 두려워해서 영국이나 다른 열강의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일관된 분석을 안출해 낼 수 없었으며 계기적 위기들에 대한 일련의 경험적인, 종종 뒤죽박죽인(muddled) 반응들을 서술하는데 만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들의 저서가 독자들의 마음속에 남긴 궁극적인 인상은 영제국이 ‘잠시 정신이 나간 사이에’ 회복되었다는 옛비토리아언명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E. H. Carr의 *Times Literary Supplement*, 1975년 3월 7일자에 실린 서평에서, in G. R. Controversy, p. 239. 스트레처의 정체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의 역서 같은 맥락에 있다.

“한 시대를 선도하는 그려 한 원동력(prime mover—금융자본의 대외투자)의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역사를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과 논대들의 뒤틀림(jumble)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E. J. Strachey, *The End of Empire*, Gollanz, (1959) p. 123.

40) R. Owen, “Robinson and Gallagher and Middle Eastern Nationalism: The Egyptian Argument,” in *G.R Controversy*, p. 215.

41) 앞서 나온 책, *Africa...*, p. 471.

42) 앞서 나온 논문, “Partition...,” p. 593.

43) 이 말은 키어난이 인도안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겔러거와 로빈슨의 설명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 V. G. Kiernan, “Farewells to Empire; Some Recent Studies of Imperialism,” in *The Socialist Register*, 1964, p. 270.

44) 이 논문, p. 154 참조할 것.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언명과는 달리 새로운 단일설명모형(a single explanation model)을 만들어 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설명에 무리가 수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키어난은 19세기 중엽이래 영국의 공문서에 계속 등장하는 ‘인도루트안전’이란 상투어가 세기 말에는 그 내용을 털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p>45)</sup> 키어난에 따르면 정부기판은 구식의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보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야심은 목적실현을 위해 구식용어를 사용하였다. 예컨대 버마의 목재와 페르샤의 석유, 말레이지아의 고무등에 눈독을 들인 이권사냥꾼들과 이들을 암암리 지지하는 정치가들은 “인도가 위협해진다”고 떠벌림으로써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정부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경제결정자들이 공문서에 남긴 인도루트안전을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키어난은 더 나아가 관리들이 그들의 진정한 동기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법이라고 주장하였다.<sup>46)</sup> 키어난에 따르면 관리들은 후세 역사가들이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자료를 남겨둘만큼 신중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중요한 자료를 남겨두지 않을 만큼 신중하였다. 논의된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내각회의의 가장 엄격한 규칙이었다는 것이다. 키어난의 이러한 말은 광범한 관변자료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걸리거와 로빈손의 설명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관리들의 진정한 동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키어난은 19세기 말 금권정치(plutocracy)의 발전을 지적하면서 정치가와 자본가의 유착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백작과 프리시아의 용커가 유대인 상속녀와 결혼하고 정치가들이 금융가의 중역을 맡는 등 사회상층부에서 하나의 사회계층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는 새로운 제국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

45) 앞서나온 논문, “Farewells to Empire,” p. 266.

46) 같은 논문, p. 265.

했다. 키어난은 이러한 구조적 접근방식이 아니면 정경유착의 혐행법을 잡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라며 구체적 증거의 부족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비꼬고 있다.

“겔리거와 로빈슨의 증거법칙에 따른다면 어떠한 기업로비도 유죄판결을 받으려면 호주머니에 자백서를 가진, 그리고 세명의 각료들이 현장을 목격한 협법이라야만 한다.”<sup>47)</sup>

키어난의 이러한 말은 유감스럽게도 겔리거와 로빈슨의 ‘제 급적 이해로부터 초연한’ 정책결정자들을 정황증거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 1880년대 영국에서는 상업엘리트와 지주엘리트가 정치와 사회생활에서 더욱 밀접하게 결합됐으며 금융이해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우세해졌음을 여러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sup>48)</sup> 이러한 연구들은 키어난의 정황증거를 부분적으로 강화해준다.

키어난의 정황증거에 비추어 볼때 이집트전령의 결정에 대한 겔리거와 로빈슨의 설명자체에서도 우리는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이집트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결정이 그 금융이해에 좌우되었음을

47) 같은 논문, pp.267~8.

사실 금융자본내지 다른 경제적 이해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의 증거문제는 구조적 상황을 중시하는 경제체계국주의론자들과 구체적 증거를 원하는 그 비판자들 사이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헤넌의 경우 거대한 금융자본의 힘에 비추어 그것의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자명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퇴적판례에 적위제공, 배수, 언론조작, 대운행에 의한 관리의 자본판례등 급진정치의 사례들을 제시했으며 흡수는 금융자본의 언론을 통한 언론조작을 강조했다. Lenin, 앞서 나온 논문, “Imperialism” pp. 206~10, Hobson,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p. 59~61.

플라트는 개별적인 무역업자나 금융가의 압력을 보다는 구조적 상황의 압력을 강조하였다. 즉 “영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의 종체적 미래상이 열강의 보호무역에 의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을 때 어떤 영국정부도 초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D.C.M. Platt, “Economic Factors in British Policy during the ‘New Imperialism’, ” *Past and Present*, No. XXXIX (1968), pp. 137~138.

48) W.D. Rubinstein, “Wealth, Elites, and the Class Structure of Modern Britain”, *Past and Present*, No. 76, 1977. pp.123~4, P.J. Cain, A.G. Hopkins, “the Political Economy of British Expansion Overseas, 1750~1914”, E.H.R. Vol. 33, No. 4, (1980) pp. 481~85.

강조한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이해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sup>49)</sup>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공채소유자들의 요구가 공문서에는 인도의 안전에 대한 전략적 고려 속에 은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결국 적법적인 증거의 결여를 내세우며 정책결정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과 구체적 증거의 포착이 불가능하므로 경황증거에 의존해 정책결정자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관의 입장은 서로 협일점을 찾기 어려운 평행선을 탈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때 아프리카에서의 거의 모든 병합 사례들에 대한 갤러거와 로빈슨의 설명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절대자, 인도전략이 표면적으로 공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관리 들의 진정한 동기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알수 있다.

갤러거와 로빈슨의 인도전략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비판은 팽창하는 경제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결정자들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고려로 병합을 단행했다는 지적이다. 스톡스는 18세기 정부와 해외무역이 자기 자율적 추진력을 갖게된 이래 정치가들의 전문화된 목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이라기 보다는 전략적 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50)</sup>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을 병합할 때 역시 정책결정자들은 전략이란 안경을 통해 병합의 필연성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도 우리는 ‘관료적 사고의 인도전략’이 병합을 요구하는 다른 압력들의 단순한 전략적 표현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49) 갤러거와 로빈슨은 프랑스의 정책결정자였던 Freycinet가 뒤에 시인했던 말 —금융문제가 우리의 외교정책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다—을 인용하여 프랑스의 금융이해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한 반면 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공채소유자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협의를 살까봐 이들의 지원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나온 책, *Africa...*, pp.117~119.

50) E. Stokes,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and the Attack on the Theory of Economic Imperialism: A Case of Mistaken Identity?”, *The Historical Journal*, III, 2, (1969) p.293, 같은 저자의 “Imperialism and the Scramble for Africa: the New View” in *G.R.-Controversy*, p.187. 협(R. Hyam)도 “경제적 고려들은 정부문서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Partition of Africa”, *Historical Journal*, VII-1, (1964), p.159.

이제 우리는 다시 갤러거와 로빈슨이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한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팽창하는 경제의 압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논의의 출발전제로서 팽창하는 경제가 아프리카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하고 왜 충동없는 제국주의가 존재하게 됐는지 고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들은 전승되어온 관료적 사고에서, 다시 말해 파마스톤적인 낙관주의적 전통과 인도안전이라는 현실주의적 전통에서 답변을 발견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영령 아프리카제국을 가져올 만한 다른 팽창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동기 자체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경제적 압력의 不在를 전제한다면 정치와 경제의 유착이나 경제의 전략으로 환산등의 비판은 그 전제의 정당성을 와해시키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팽창하는 영국경제와 아프리카대륙의 관계가 이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먼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IV.

아프리카대륙이 팽창하는 영국경제에 대체로 마지막(marginal)한 가치만을 가졌음은 분명하다. 갤러거와 로빈슨을 비롯한 경제제국주의론의 비판자들이 곧잘 제시하는 간단한 무역과 투자의 통계만으로도 이러한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십지어 이들이 공격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왔던 흑인이나 레닌 역시 아프리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게 아니며 레닌의 경우 그 자신의 통계에서 투자의 주된 대상지역이 아프리카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한 바 있다.<sup>51)</sup>

51) 흑인은 제국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체 영국경제에 오히려 유해하며 일부 상인이나 금융업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금융자본의 투자욕구를 강조함으로써 투자대상지역의 통계를 제시하는 비판자들에게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레닌의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이 대륙에 대한 팽창하는 경제의 관심 역시 미미하여, 그래서 통합을 요구하는 대상지역에서 이 지역이 제외됐다는 주장을 반드시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다. 빅토리아후기에 있어 영국경제의 구조적 변동과 새로운 공업열강의 경쟁 등 새로운 변화들을 우선 제껴 두더라도, 영국의 지속되어온 자유무역제국주의 정책이 서아프리카등 적어도 아프리카의 일부지역에 대해 통합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팽창하는 경제의 새로운 팽창욕구가 아닌 빅토리아전기이래 지속되어온 정도의 팽창욕구만으로도 아프리카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일 수 있으며 영국정부 역시 이에 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19세기 중엽 영국경제에 통합되었다고 갤러거와 로빈슨이 주장했던 지역들도, 예컨대 남아메리카와 헤반트, 오스트레리아 등도 그 당시에는 영국경제에 역시 마지날한 지역이었다.<sup>52)</sup> 플라트는 19세기 중엽 영국경제가 국내시장 및 기존의 시장에서 충족되었으므로 새로운 시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새로운 지역 역시 지불수단의 부족등으로 영국과의 무역을 지속할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무역제국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sup>53)</sup> 간단히 말해 팽창하는 영국경제가 그 당시에는 새로운 지역의 통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플라트로부터 이러한 비판을 받았던 갤러거와 로빈슨이 빅토리아후기의 아프리카분할에 대한 설명에서는 역설적으로 플라트의 말을 반복하고 있

경우 금융자본의 저개발지역에 대한 자본수출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상지역이 주로 ‘세계자본주의권에 이미 펼쳐된 지역’임을 분명히 하였다. 퀘닌이 제시한 통계는 투자대상지로서 아프리카의 위치를 강조하지 않았다. Hobson,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제2장 제국주의의 상업적 가치, pp. 28~40, 제4장 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생자들, pp. 46~63, Lenin, 앞서 나온 논문, “Imperialism”, pp. 213~215.

52) Hobsbawm, 앞서 나온 책, *Industry and Empire*, p. 131. 흡스봄은 182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개항이 영국의 기업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처음에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으며 1880년대 아프리카분할 역시 지역에 따라선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53) D.C.M. Platt, “Further Objections to an ‘Imperialism of Free Trade’, 1830~1860”, E.H.R., Vol. XXVI, No. 1 (1973) pp. 85~6. 이에 대한 논쟁은 앞서 나온 필자의 논문, “19세기 중엽에 있어 영국의 대외팽창성격논쟁” pp. 25~6.

다. 이들은 팽창하는 경제가 새로 요구하는 지역들이 대체로 마지막 날한 지역이었음을 방각한 것 같다. 다시 말해 이들은 빅토리아 후기에는 팽창하는 경제의 통합대상 지역의 자격요건을 갑자기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자유무역 제국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제한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영령 아프리카제국의 건설에 대한 이들의 설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통합자격 요건의 강화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 영국경제에 지속되어 온 정도의 팽창욕구가 빅토리아 후기에 들어 감소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갤러거와 로빈슨은 팽창하는 경제와 모든 아프리카지역의 거리를 지나치게 벌려놓음으로써 ‘원치 않은 제국주의’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고 그 결과 이집트에선 정책결정자들의 실수로, 그리고 이와 계기된 제 사전들에선 인도안전이란 절대자제문이라는 궁색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팽창하는 영국경제가 마지막 날한 지역을 계속통합해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거대한 아프리카대륙의 모든 지역을 통합대상에서 제외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사실 흡수이래 많은 경제제국주의 이론가들은 19세기 말 자본주의 경제의 미개발지역에 대한 통합요구를, 다시 말해 영국경제의 아프리카통합의 필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논자에 따라선 지나치게, 강조해왔다. 새로운 공업열강의 대두로 인한 영국의 공업적 우세의 약화와 이에 따른 치열한 시장경쟁, 대불황 (Great Depression 1873~1896)으로 인한 과잉자본과 생산의 압력 및 실업문제, 독점체의 성장에 따른 시장과 원료의 독점요구,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미개발지역의 개발 가능성 증대, 열강의 보호무역으로 전환, 閉所공포증 등 영국과 유럽경제에서의 제 변화들에 대한 강조는 영국 경제가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발지역에 대한 통합을 최소한 빅토리아전기보다는 더 강력히 요구했음을 증명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갤러거와 로빈슨이 아프리카분할의 설명에서 왜 이러한 요인들을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였을까? 흡킨즈가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이

들은 흄슨-레닌 모형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에 대한 반대를 지나치게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전적 경제제국주의론이 수많은 결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직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경제적 동기들이 아프리카분할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54)</sup>

겔러거와 로빈슨은 흄슨-레닌모형의 제국주의론이 유럽경제에 대한 아프리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한다.<sup>55)</sup> 이러한 점은 다른 비판자들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흑진즈처럼 새로운 경제적 해석을 모색하는 학자들도 은연중 부분적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sup>56)</sup>

그러나 이들의 주된 논파대상인 레닌은 아프리카가 유럽경제의 중요한 통합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오히려 그의 주된 관심은 주변부세계의 분할보다 중심부국가들의 제국주의적 패권투쟁에 있었다. 사실 레닌은 아프리카에 대해 거의 언급한 바 없으며 그의 논리상 독점자본주의로 이해

54) A.G. Hopkins, *Economic Imperialism in West Africa; Lagos, 1880~92*, E.H.R., Vol. XXI, No. 3 (1968) p. 583. 앞서 카의 비판도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 논문, p. 156 참조.

55) “영국의 기업은 필요한 자본이나 식민주의자들을 제공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아프리카사회는 확실히 무역과 수입 혹은 협력자들을 제공할 수 없었다. 다양한 제국주의이론들의 핵심주장은 아프리카가 이러한 본질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나온 책, *Africa...*, p. 15.

56) 비판자들의 오류는 먼저 흄슨이론과 레닌이론의 차이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모형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레닌의 제국주의는 단순한 식민주의(*colonialism*)가 아니며 단순히 잉여자본의 저개발세계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흄슨의 제국주의와 다르다. 즉 레닌의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자체이며 식민주의와 자본수출은 그 일부 속성을 가리킬 뿐이다. 레닌의 제국주의개념에서 우리의 목적상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해보면 그의 제국주의는 열강에 의한 저개발세계의 분할이며 농업지역의 병합뿐만 아니라 열강의 패권투쟁 자체를 의미한다. 비판자들의 보다 큰 오류는 레닌이 설정한 제국주의시대를(1900년경 이후) 20~30년 소급된 것으로 세계해동고 독점제의 不在를 비판해 왔다는 점이다. 레닌은 단지 경쟁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기(1870~1900)가 열강의 식민지 각축과 연관을 가짐을 시사했을 뿐이다. E. Stokes, 앞서 나온 논문, “...A Case of Mistaken Identity”은 레닌에 대한 비판자들의 잘못된 전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로드니가 지적하듯이 적은 자본이 아프리카에 투자됐음을 증명하려는 엄청난 노고들은 레닌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 전제한 레닌의 오류를 증명하는 데 그쳤다. W. Rodney, “The Imperialist Partition of Africa”, *Monthly Review*, April, (1970), p. 104.

하는 유럽 경제가 아프리카 지역도 요구했다는 정도의 언급을 한 셈이다. 이것은 팽창하는 경제가 새로운 지역의 통합을 요구했다라는 갤러거와 로빈슨 자신의 초기 주장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문제는 갤러거와 로빈슨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이 아니라 레닌이론을 비판하기 위해 아프리카 분할에 대한 설명에서 경제적 요인을 거부하는 극단으로 나갔다는 점이며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세운 자유무역 제국주의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팽창하는 경제가 요구하지 않은 영령 아프리카 제국은 궁극적으로 자유무역 제국주의가 아닌 다른 제국주의의 소산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부트의 안전에 의존하는 갤러거와 로빈슨의 아프리카 분할에 대한 설명은 아프리카의 각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영국의 식민지 팽창은 인도부트와 관계없이 무역의 위기가 주된 요인으로 제시되며<sup>57)</sup> 이집트와 남아프리카의 경우 인도전략 못지 않게 투자기금의 경제적 이해가 강조되었다.<sup>58)</sup>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개별적 병합 사례들을 일일이 따져볼 여유가 없다. 그러나 개별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은 19세기 말의 상황에선 비록 그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해서 그 지역이 영국 경제의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며 다만 영국 정부는 종전대로 간접지배를 선호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지배 체제를 수립했다는 데 대체로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팽창하는 경제와 아프리카의 거리를 좁힐 것으로 최소한 갤러거와 로빈슨 자신들이 부정한 자유무역 제국주의론을 다시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영국의 대외 팽창 성격이 빅토리아 시대 전채

57) 필자의 논문, “1880년대 Niger 강 유역에 있어서의 영국의 팽창성격 : Obobo의 왕 Jaja의 폐출사건을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제6집. 여기에 실린 문현안내 참조.

58)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 문현 안내는 P.J. Cain, *Economic Foundations of British Overseas Expansion, 1815~1914*, the Macmillan Press, (1980), pp. 50~58을 참조할 것.

에 걸쳐 자유무역제국주의 시대로 규정될 수 있는가?

빅토리아전기에 있어 영국의 자유무역제국주의정책은 유일한 세계의 공장으로서 공업의 절대적 우세에 입각한 자무유역을 통해 간접지배를 선호했고 이 방식은 대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다른 열강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19세기 말 영국의 절대적 우세는 와해됐으며 영국은 독일·미국 등과 함께 3대 공업국가에 드는 정도였다.<sup>59)</sup> 생산의 집중방식을 백한 독일과 미국이 공업의 중요부문에서 영국을 앞질렀으며 영국의 제품은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열강의 보호무역도 큰 위협이 되었다.<sup>60)</sup> 이는 자유무역제국주의의 토대가 되는 공업의 우세가 와해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가들과 무역업자들의 보호무역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국정부가 자유무역을 고수했음은 사실이다. 흠크스와 케인에 따르면 이는 영국이 세계의 금융중심지로 되고 이자 등 보이이 않는(invisible) 수입이 가장 중요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sup>61)</sup> 이러한 영국의 국제적 금융체계의 지배는 자본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빅토리아전·후기 사이에 자유무역제국주의정책의 질적 변화를 볼 수 있다. 즉 전기에 있어 자유무역은 공업의 우세에 입각했으며 그러한 우세를 계속 유지하려 했던데 비해 후기에는 금융의 우세에 입각했으며 그러한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후기의 자유무역은 경쟁력이 떨어진 공업을 더욱 약화시켜 영국을 직접 이자취득국가로 변질시켰으며 그 궁극적 결과는 영국의 몰락이었다.

영국정부가 구인도제국의 보호 아닌 자유무역지대의 보존을 위해 예방 병합을 단행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점<sup>62)</sup>도 자유무역제국주의의 질적 변화였

59) Hobsbawm, 앞서 나온 책, *Industry and Empire*, p. 127.

60) Platt, 앞서 나온 논문, "Economic Factors...", 吉岡昭彦, 《제국주의의 정치경제학》 김영일역, 예매, pp.151~155.

61) Hopkins, Cain, 앞서 나온 논문, "Political Economy..." pp.484~489. Hobsbawm, 앞서 나온 책, *Industry and Empire*, pp.150~152.

62) C. W. Newbury, "Victorians, Republicans, and the Partition of West Africa", *Journal of African History*, III.3 (1962) pp.498~501, Platt, 앞서 나온 논문, "Economic Factors...", pp.121~138, Hynes, 앞서 나온 논문,

다. 빅토리아전기의 자유무역제국주의는 대체로 간접지배에 성공했고 드물게 보이는 ‘부득이한’ 직접지배의 경우도 다른 열강에 강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기의 자유무역제국주의는 새로운 지역의 위성경제권 편입 과정에서 대개의 경우 직접지배수단에 의존하였으며 이는 다른 열강의 보호무역에 의해 강요되었다. 다시 말해 후기에는 강력한 경쟁국들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새로운 생산과 자본집중의 토대위에서 보호무역에 의한 식민지독점을 지향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계시장에 대한 영국의 독점적 상황과 열강의 경쟁적 상황을 확실히 구분해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의 변동이 금융우세에 입각한 자유무역제국주의로 하여금 결국은 직접지배로 일관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자유무역을 통한 간접지배의 선호를 자유무역제국주의의 본질로 볼 때 결국 그러한 제국주의는 세계시장에 대한 영국의 독점적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빅토리아후기의 설명으로서 갤러거와 로빈슨의 자유무역제국주의론은 영국관리들의 대외팽창동기의 연속성을 증명하는데는 성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19세기 말 영국정부의 관리들이 금융우세를 토대로 한 자유무역을 통해 간접지배를 선호했으며 직접지배, 달리 말하면 노골적인 제국주의침략을 이전처럼 여전히 꺼려했다는 점이다. 비록 결과는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지만. 다시 말해 자유무역제국주의는 판료적 사고에서는 연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빅토리아후기의 ‘자유무역제국주의’는 그 당시 관리들이 그것을 의식했건, 못했건 간에 공업의 말(馬)대신 금융의 말로 갈아탔으며 자본집중과 보호무역이라는 駿馬를 타고 나타난 열강과의 세계시장각축에서 ‘결국은 노골적인 방식으로’, 즉 직접지배라는 수단을 통해 ‘사자의 봇’을

“British Mercantile Attitudes...”, pp. 969~979.

이들의 주장은 아프리카지역에서 영국의 식민지팽창이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시장독점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열강의 지배가 가져올 보호관세와 차별待遇로부터 자국의 상인과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영국정부는 공정한 배우와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를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새로운 제국주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제국주의의 연속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절된 측면과 연속된 측면 가운데 어느 쪽을 강조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라클루(Geoffrey Barraclough)가 지적하듯이, 신제국주의의 자국이 강력했던 지역은 새로운 국가들이었으며<sup>63)</sup> 기존의 거대한 제국을 가졌기 때문에 수구적 태도를 견지했던 영국조차 경제구조의 변동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빅토리아후기의 대외팽창성격은 전기의 그것과 달리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63) G. Barraclough,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History*, 김봉호역, 『현대사의 성격』, 삼성문고(1977) p.55.